
 <div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h1 style="margin: 0;">부산남구공보</h1> <p>제 1253호 2023.10.6.(금)</p> </div> 																			
선 람	기 관 의 장	발행·편집 /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 (48452) ☎ 607-4068 / FAX 607-4919	공보는 공문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입법예고</div> <p>▶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3-1242호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2</p> <p>▶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3-1246호 [부산광역시 남구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시 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7</p>																			
공 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height: 40px;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td> </tr> </table>																		

◆ 부산광역시남구 공고 제2023-1242호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부 산 광 역 시 남 구 청 장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징계, 민사소송이나 형사 수사단계에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한 법률 지원을 의무화하고, 재직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공무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제2조)
- 나.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변호인 등의 보수 지원 등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라. 수사기관 등 의견제출(안 제6조)
- 마. 지원신청 등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7조~안 제11조)

- 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제13조)
- 사. 지원의 취소 및 보수의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제15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기획감사실(전화: 051-607-40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장)
- 전화번호 : 051) 607-4015 (Fax. 607-4019)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징계, 민사소송이나 형사 수사단계에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한 법률 지원을 의무화하고, 재직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공무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제2조)
- 나.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변호인 등의 보수 지원 등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라. 수사기관 등 의견제출(안 제6조)
- 마. 지원신청 등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7조~안 제11조)
- 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제13조)
- 사. 지원의 취소 및 보수의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제15조)

3. 주요 토의과제 : 해당사항 없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실시예정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평가예정

5)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6)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소속 기관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지원범위, 방법 등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제4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1. 고소·고발 등의 경우 :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 원 이하

의 범위 내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③ 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5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4조의 지원을 받은 공무원(이하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라 한다)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부산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6조(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제4조제1항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제4조제2항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기타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지원절차 안내 등) ① 책임관은 제7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지원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책임관은 제7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상정·심의) ① 책임관은 제9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등이 종료된 즉시 제7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9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3조의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책임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거나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기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② 책임관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3조(진행상황 보고) 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3개월마다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책임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5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중 어느 하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3조제1항은 제외한다)
3.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제15조(변호인 보수의 반환) ① 제14조에 따라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담당자	소속 :	직 급 :	성 명 :
	담당업무			
신청내용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input type="checkbox"/>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건 제출			
사건번호	고소·고발 등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사건개요				
구비서류	<input type="checkbox"/>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급계산서 <input type="checkbox"/>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서류			
<p>신청인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인하여 다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명확히 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인)</p>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illegible]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illegible]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요인 : 징계의결 및 형사·민사 사건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규칙안 제4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구분	번호인·소송 대리인 선임비용	7,000	7,000	7,000	7,000	7,000	35,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구분	국비						
	시비						
	구비	7,000	7,000	7,000	7,000	7,000	35,000
	민간						
	기타						
합계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6.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행정7급 김태진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2,000천원 × 1명(징계의결 등) + 5,000천원 × 1명(형사·민사)

부산광역시남구 공고 제2023-1246호

부산광역시 남구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시 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남구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시 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부 산 광 역 시 남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남구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시 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관련 법령의 제명 변경 등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제2조)
- 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안 제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참조: 교통

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교통정책과
(전화: 051-607-48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참조 : 교통정책과장)
- 전화번호 : 051) 607-4851 (Fax. 607-4559)

부산광역시 남구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시 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관련 법령의 제명 변경 등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관련 법령 제명 등 변경사항 반영(안 제4조)

3. 주요토의과제 : 해당사항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 · 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2023. 10. 6. ~ 2023. 10. 13.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단축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예정

5)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6)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남구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시 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시 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을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으로, “법 제19조제9항”을 “「주차장법」 제19조제9항”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법 제19조제5항”을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의 비교표에 따라”로,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한국은행법 제86조”를 “「한국은행법」 제86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의 비교표에 따라”로, “동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등이 6개월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19조제9항의 규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 ----- ----- 「주차장법」 제19조제9항-----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 ----- --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 -----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 <u>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u>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u> 으로 할 수 있다.	3.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의 비교표에 따라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이내----- -.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u>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u> 보정하여 산정한다.	4. ----- ----- ----- 「한국은행법」 제86조----- -----.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②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 <u>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u>	3.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의 비교표

<p><u>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u> 산정 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동법</u> <u>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u> <u>업자가 6월이내에</u> 평가한 가액으 로 할 수 있다.</p> <p>4. (생 략)</p>	<p><u>에 따라</u> ----- ----- ----- 「<u>감정평가</u> <u>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u>」 제5 <u>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등이</u> <u>6개월이내</u>-----.</p> <p>4. (현행과 같음)</p>
--	--